

“외설잡지 범람, 강력한 대책 마련을”

잡지윤리위원회 「대중잡지의 올바른 위상」 토론회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면서 외설대중잡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鄭漢模)는 지난 6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잡지의 올바른 위상」이란 주제로 잡지윤리세미나를 가졌다.

“윤리위원회에 준사법기능 부여해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劉載天교수(서강대 신문방송학)는 우리나라 대중잡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설잡지들이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기사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개방과 청소년 탈선’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량출판물’ 식의 고발기사가 실상은 향락과 탈선정보를 소상히 제공하고 있다면서 대중잡지 관계자들의 비윤리적 자세를 비판했다. 劉교수는 또 대중잡지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준사법적 기관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재작성, 외설에 대한 적극적인 법원 고발, 포르노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장치 법제화, 범사회적인 대중잡지추방운동 전개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중잡지의 상업성과 윤리성」이란 주제로 발제강연을 한 李光宰교수(경희대 신문방송학)도 잡지계의 자기 통제기능 강화, 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도단속, 잡지인에 대한 정기적 윤리교육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白亨球변호사는 대중잡지의 성적 표현의 법적 한계를 설명하는 한편, 법률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윤리적 한계에 의해 허용될 수 없는 기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白변호사는 특히 잡지사·출판사측의 자율적 정화운동을 강조했다며, 劉교수의 의견과 달리 윤리위원회가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의 간추린 토론내용이다.

“대중잡지만의 책임 아니다”

▲곽호중(월간 「사실」 발행인) - 사전에 의하면 ‘대중잡지’는 “흥미를 위한 대중적인 잡지”라고 풀이되어 있어, 대중잡지는 흥미가 우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대중잡지에 흥미기사가 전혀 없다면 그 잡지는 독자

의 외면을 받아 살아남기가 어렵다. 대중잡지는 흥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비리에 대한 고발 등으로 경종을 울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세계1위라고 해서 모든 자동차를 없앨 수 없듯이, 대중잡지의 부정적인 일면만을 확대·왜곡시킨다면 자동차의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도덕이나 윤리관은 영구불변의 철칙이 아니라 시대변천에 따라 걸맞게 달라지는 것이다. 오늘날 성도랄의 문란을 사회계문제는 짓혀두고 대중잡지에만 책임전가한다는 것은 소수의 특권의식이며 지식층의 도그마적 오만성이다. 대중잡지의 글이나 사진들이 선정적이라는 비판은 그릇된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대중잡지는 성적 호기심이나 욕구를 적절히 증발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김정득(서울 YMCA 간사) - 대중잡지의 속성상 그 내용이 흥미위주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는 수긍이 가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시각에 따라 흥미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자기편의주의에 의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이는 오늘의 유해한 대중잡지들이 갖고 있는 비윤리적인 상업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출판은 어디까지나 공익성을 지닌 문화사업이므로 천박한 문화사업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문화사업을 상업성에 이용하고 있음은 발행인의 윤리의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

YMCA가 청소년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불량출판물 접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중 24.5%가 불량출판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국민학교 때부터 접촉했다는 대답도 15%나 됐다. 또한 지난 4월 월간지들을 무작위로 선정·분석한 결과, 고발·밀착 취재·독자수기 등의 기사들이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잡지매체의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질출판물에 대한 단속·규제강화, 윤리위원회에의 준사법적 권한 부여, 잡지육성 기금 조성, 전문편집인 양성, 성인잡지 전문점 개설 및 우편판매 실시 등 소극적 대책이 강구되는 한편, 잡지 모니터 제도와 불매운동과 같은 적극적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하겠다.

“불매운동 등 적극적 대책 있어야”

▲김태진(서울시교육위원회 장학사) - 최근 들어 학생들의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클로



대중잡지의 외설성을 진단하고 그 개선책을 논의한 '89 잡지윤리 세미나 전경. (6월 7일 프레스센터)

즈업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아직 가시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먹여서는 안될 극약을 먹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대중잡지와 함께 음란 비디오의 책임이 크며, 사회 다각도에서의 캠페인과 함께 공권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놓고 아동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극약이나 다름없는 불량출판물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김희돈(「제5세대 건강」 발행인) - 일년전 우리 잡지발행인들이 모여서 잡지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화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는데,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잡지의 윤리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가 아닌가.

좋은 책을 만들면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독자들은 신뢰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잡지만 만들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잡지발행을 중단하라는 의미밖에 안된다.

건강을 위해 좋은 영양제를 권하면서 그 내용에 노출이 과한 건강한 미녀의 사진을 실은 편집이 과연 부당한 행위인가. 이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서점을 출입하는 연령층은 25세 이하이다. 따라서 잡지는 그들의 기호에 어느 정도 영합치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잡지윤리규범이 시대변화에 따라 잘못됐으면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

대중지가 공권력이나 여론에 의해 지탄받는 것은 옳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보는 성이나 노출에 관한 척도는 재조정돼야 한다.

“보편적 상식 일탈한 편집자세 문제”

▲백형구(변호사) - 외설의 기준문제가 있어 「제5세대 건강」지의 발행인 주장처럼,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결코 77년도의 시대적 기준에 의해 행해지고 있지는 않다. 심의는 오직 89년도 현 시대감각을 기초로, 사회적 윤리성과 유해성 그리고 대상독자의 연령층을 참작하여 신중을 기해 이뤄진다. 따라서 「제5세대 건강」 발행인이 소위 ‘상식’이라는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점은 오히려 납득할 수 없으며, 잡지의 발행인이 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잡지발행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제발표내용 중 윤리위원회를 준사법적 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그것은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기구는 순전히 민간기구여야 한다.

▲이중환(사회자·서울신문 논설위원) - 토론의 공통적인 쟁점이 외설성,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선정성의 해석, 잡지 종사자들의 윤리성 문제로 모아진 것 같다. 외설성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이보다 앞서 우리 사회 전체의 향락적 분위기와 매체의 역할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겠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요소들을 그들의 문화권에서 제거하는 데만 노력하기보다는, 유익한 것들을 자꾸 끼워넣어 유해한 요소들이 스스로 물러나 버섯력을 잃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오애리 기자